환경자치권 강화 위한 협력 본격화

전북 · 강원 · 제주, 환경영향평가 협약 체결… 사례 공유와 제도 개선 공동대응 등 환경자치권 확대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환경자치권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전북 · 강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환경영향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 · 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세 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관련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27일부터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지정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추진 사례 공유 및 협의 방안 마련 △전문 검토기관과 자문단 구성 · 운영 △지역 주도의 환경영향평가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등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권 확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동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자원 관리 방안 논의 등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전자민원모니터 성과보고 · 역량 강화 교육

도내 14개 시군서 120명 참석… 올 한해 134건 제보 · 제안 통해 도민과 도정 소통 매개 역할 '톡톡'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 · 군에서 선발된 전자민원모니터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자민원모니터 성과보고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한 전자민원모니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수 활동자들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으며,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활동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전자민원모니터는 올해 134건의 제보와 제안을 접수하며 도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고 정책 개선을 도왔다. 접수된 민원은 신속히 도와 시군 담당부서에 배정돼, 7일 이내 회신 처리되는 체계적인 운영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모니터들은 단순히 민원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정 현안과 정책에 대한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을 보다 도민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원통합망 관리체계에 대한 직무교육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예방, 강화될 현장 행정 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홍보가 포함된 알찬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전자민원모니터로 활동 중인 한 도민은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 8기 도정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자민원모니터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소통이 시작된다"며, "민원 신속처리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원활하면 민원 발생 이전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한 모니터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도는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며, 민생 중심의 도정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전자민원모니터 성과보고회 및 역량강화 교육'에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 · 군에서 선발된 전자민원모니터 120여 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정책 잘했다' … 전북자치도, 전국 우수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한 '제6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상'은 4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는 광역 3개(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기초 6개(서울시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경기도 광명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광주광역시 북구)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춰 유관기관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한 신규사업과 판로 지원사업을 지방비로 추가 편성해 정책 대응력을 높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개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발굴부터 육성, 고도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 공간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한자리에 모여 지원기관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 자조기금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금'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 등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특례보증을 추진하며 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

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정책 · 비전으로 완주군민들과의 소통에 힘써야"

도의회 기획재정위, 자치행정국 등 대상 예산안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2일 자치행정국 소관 등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공직자들의 복지 부분에 있어 물가인상 등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증액은 삼가야 되고, 2025년 신규 사업들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 통폐합도 설득과정이 쉽지 않은데 전주-완주 통합은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겠냐며 지역통합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재정인센티브 확보와 정책과 비전으로 완주군민들과의 소통에 힘 쓸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자치도 전기 8%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태양광 발전설비는 노후 및 고장으로 효율이 저하되고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청사 내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을 전수조사해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저출생 · 인구정책과 관련해 도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다자녀 직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아이를 낳으면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만큼 국가가 지원해주고 책임져 준다고 느끼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하얀양옥집 운영 방식 재검토… 합리적 예산 집행방안 마련을"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2일 제415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등 의안심사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최소 15%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증감액은 약 120억으로 증감률이 9.7%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하얀양옥집(구 도지사 관사)의 복합문화공간 활용방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운영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하얀양옥집 운영에 매년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현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유사 문화공간의 운영 사례와 비교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독서 · 문화 · 공간을 제공하며 인구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

박정규 도의원,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중장년 노동시장이 조기 퇴직, 휴 · 폐업 등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에 따라 중장년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북자치도 중장년창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지난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장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장년창업자를 위한 지원 공간 및 인프라 조성 △중장년창업자의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치매 관리사업 '빛났다'

'치매관리사업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4년 치매관리사업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북자치도광역치매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향상 프로젝트'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 사업을 확산 · 공유함으로써 치매관리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 및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참여하였으며, 우리도 광역치매센터를 포함한 총 9개 기관이 본선으로 진출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1~2025) 내용 중의 하나인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총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자 △수요 기반 실무자 교육 및 간담회 △사례관리 현황집 발간 · 보급 등 기술지원 등 다각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맞춤형 사례관리 외에도 치매예방, 조기발견, 치매 치료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 1개소, 시군 치매안심센터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광역치매센터는 자체 개발한 인지중재 프로그램 '기억짝꿍'을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 29개소에 보급하여 효과성 연구를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공립요양병원 1,377개소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 및 14개 시군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의 후견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인을 양성 및 관리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는 지난 22일 완주군에서 열린 '정책소풍'을 통해 수소산업의 미래 비전을 도민과 함께 설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완주, 대한민국 수소경제 심장으로 도약

전북자치도, 완주 정책소풍에서 수소산업 비전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완주군에서 열린 '정책소풍(Saw-風)'을 통해 수소산업의 미래 비전을 도민과 함께 설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정책소풍(Saw-風)'은 전북자치도가 도내 각 시군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보고(Saw), 도민과 함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즐겁게(So Fun), 지역에 변화의 바람(風)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소통형 정책 프로젝트다.

이번 완주 정책소풍은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완주군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문성철 완주군 부군수, 김규성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수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R&D 기관 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현장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전북자치도와 완주군은 이날 행사에서 테크노파크 내 수소도시 통합운영안전관리센터를 둘러보며, 완주군의 수소산업 육성 비전과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아이디어 보물찾기' 세션에서는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 △스타트업 청년인력 채용 및 산업단지 분양 지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컨설팅 확대 △모빌리티 분야의 수소 전환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며 미래 전략이 공유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완주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할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며, "이번 정책소풍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완주가 수소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평통 전북, 평화통일대화 워크숍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지난 22~23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지역회의 운영위원, 협의회장, 자문위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평통 전북지역 평화통일대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문위원들이 지역별 통일 활동과 정책건의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차에는 정승조 전 합참의장의 '대한민국 안보와 통일 · 대북정책이 이해' 기조 강연 및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의 실무 강연을 진행했으며 2일차에는 8.15독트린 지역 활성화 방안과 2025신규 사업 아이디어 제안을 주제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현만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은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문위원들과 전북도민의 지역별 통일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워크숍을 통해 각 지역에서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와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회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멘토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